고속철 연계 교통망 구축·관광상품 개발··· 효과 극대화 나서야

호남선KTX 개통 100일 ··· 변화와 과제

호남선KTX 1단계 개통으로 2시간50 여분이 소요됐던 서울~광주 간이 1시간 30~1시간50여분대로 줄어들면서 호남을 찾는 외지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속버스와 공항 이용객들은 줄고 있다. 또 새로운 지역교통체계 구축, 2단계 조속 완공 및 연계교통망 조성, 역세권 개발 및 관광지 활성화 대책 수립등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고속버스·항공 이용객 크게 줄어=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3개월간 광주발 서울행 고속버스 이용객은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일 이후인 지난 4~6월 광주 광천동 버스터미널을 이용한 광주발 서울행 금호·중앙고속 버스 이용객 수는 27만1285명으로 지난해같은 기간(34만6244명)보다 21.6%(7만 4959명)가 줄었다. 개통 전인 지난 1~3월(34만1267명)과 비교해도 4~6월 이용

객 수는 20.5%(6만9982명)가 적다.

광주공항 역시 비슷한 처지다. 개통 전 인 지난 3월 운항 횟수는 1111번(도착 556 출발 555)이었으나 개통 후인 지난 6 월 1074번(도착 537 출발 537)로 줄었다. 여객 수도 14만95명(도착 6만9615명 출 발 7만480명)에서 11만3671명(도착 5만 8082명 출발 5만5589명)으로, 2만6424명 (18.86%)이 감소했다.

편리성·연계성·가격 경쟁력에서 고속 철도가 앞서기 때문으로, 이 같은 추세는 점차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잇따른 증편 요구에 코레일이 다음 달 1일부터 호남선 운행횟수와 일부 열차편의 좌석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주중 44회인호남고속철도는 48회로 4회 증편하며 주말은 기존대로 48회 운행한다.

또 산천(363~410석)을 좌석 수가 많 은 구형 KTX-1(931석)으로 교체해 2단계 노선 빨리 확정해 공사 서둘러야

교통 환승체계 완비·역세권 개발도 시급

KTX-1의 운행을 주중 8회에서 16회로, 주말 12회에서 16회로 늘린다.

◇호남 관광, 도약 계기 마련해야=전 남도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호남고속 철도 관련 6개 실·국 17명으로 대응전략 팀을 구성하고 5대 분야 50개 과제를 추 진했다. 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한 교통환 승체계 구축 및 역세권 개발,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안내 서비스 강화, 22개 시· 군 대표 단품요리 개발·남도음식 맛 테 마거리 조성, 특정분야 의료기관 전문화 및 고품격 의료관광 상품 개발 등이 대표 점이다

지난 6월부터는 개통 이후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6월 25일에는 광주, 전남, 전북이 호남권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해 공동전략 수립을 약속하기도 했다.

승차권과 KIA 홈경기 입장권이 결합한 '야구관람 KTX', 'KTX 진도아리랑시티투어',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폐막식 특별열차 등 각종 이벤트 연계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곡성, 순천, 여수의 인기 관광지 7곳은 당일 승차권을 제시하면 최대 50%를 할 인해준다.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순천만 정원, 낙안읍성, 순천드라마세트장, 여수 해양레일바이크, 여수 크루즈투어, 여수 테디베어뮤지엄 등이 대상이다.

홍도·흑산도 등 전남 서부권 섬 지역

도, 전라선을 타고 갈 수 있는 여수 등 동 부권 관광지도 새삼 조명받고 있다. 특히 전남 곳곳의 축제,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 을 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등 관광

효과 극대화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미흡한데다, 외지 방 문객을 감안한 관광시스템을 갖추지 못 했다는 목소리가 있다. 과거 추상적이거 나 검증되지 못한 전략을 '재탕'하거나

정책 시행 후 평가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객 유인 요소도 연중 이어져 관광업계는

◇2단계 노선 감감무소식=전남도는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호 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의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올해 예산 600억 원으로 실시설계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 만 정작 가장 중요한 노선과 건설방식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가 다른 입장을 내 놓으면서 올해 예산이 불용처리될 수 있 는 처지에 몰려 있다.

전남도와 국토부는 나주와 무안공항 을 경유해서 목포로 가는 노선을 주장하 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나주를 거쳐서 목포로 가고, 함평에서 분기해 무안공항 을 종착역으로 하는 지선을 놓자는 의견 을 고수하고 있다. 전남도와 국토부의 안 으로 하면 2조4731억원의 사업비가, 기 재부 안으로 하면 1조3427억원의 사업비 가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전 남도와 국토부는 광주 송정~목포 구간 중 43.9km는 새로 깔고, 33.7km는 기존선 을 보강해 활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기재 부는 함평에서 무안공항까지 16.6km만 신선을 놓고 광주 송정~나주~목포 구 간은 기존선으로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 다.

이와함께 광주송정역과 목포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연계 교통망 구축 등도 시급한 현안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 설명회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 등 15곳 규제정비 이행 '0'

국무조정실, 지방 규제 정비 실적 공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규제 정비 이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

국무조정실은 8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 규제 정비 실적을 공개했다. 정부가 1단계 정비 대상으로 선정한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는 총 4222 건으로, 6월 말 현재 1천722건(40.8%)이 입법예고, 의회제출 또는 공포·시행 등의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 방규제 정비 진행률에 따라 5개의 상대적 인 등급으로 구분했다.

규제정비 진행률 85% 이상인 최우수 등 급인 S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12개였다. 이중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대구 달서구는 100% 정비 진행률을 보였다. 또 63개 지자체가 A등급, 86개 지자체가 B등급, 52개지자체가 C등급을 받았다.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 부산 중구, 서울 종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충북 옥천군 등 15개 지자체는 정비 실적이 전무해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대구와 대전은 60%가 넘었고, 세종도 50% 이상 정비가

됐다. 특히 경기도는 정비 대상이 702건으로 가장 많은데도 42.7%의 진척도를 보였다. 반면 광주나 인천은 진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건축, 국토 등 지방 규제의 92.5%를 차지하는 11대 분야를 선 정해 3단계에 걸쳐 정비 중이다. 정부는 1 단계로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등 5대 분야의 규제를, 2단계로 문화관광, 지방행 정, 해양수산 분야 규제를, 3단계로 보건복 지, 산림, 교통 분야 규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2단계 3대 분야에 대한 지방규제 조사를 벌여 1711건의 정비 대상 과제를 발굴했다.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지방규제가 1천348건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했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가 296건 등이 었다. /연합뉴스

"미래세대 위해 4대 개혁 고강도 추진"

박대통령,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서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정부는 앞으로 4 대 개혁을 비롯한 국가혁신 과제들을 강 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전국의 시 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들을 초청 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우리에게는 경제 의 재도약과 국가 혁신이라는 막중한 과 제가 주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금융·공공·교육, 이 4대 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해 한시도 미룰 수가 없는 시급한 과제들"이라며 "저는 부조리와 불안한 일자리, 계층 격차와 사회 갈등 같은 문제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결코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국가혁신 과제 추진

이라는) 그 길을 가는데 있어 중앙과 지방 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 공부문 개혁이 모든 개혁의 시작인 만큼 지방이 먼저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시대 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면 감사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전국 기 초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 자리에

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5억 주식보유자·안마시술소 운영자도 기초급여 받아

복지재정 줄줄샌다 … 부당지급액 4461억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 재정을 확충하고 있지만, 복지재정이 줄 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억원 상당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 는가 하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기 초생활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 대 학생은 등록금이 247만원인데도 1천만원

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다. 감사원은 8

일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총 52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복지 재정 부당지급 금액은 4천461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연간 1천52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 것이다고 시작됐다.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과정에 비상장 주식 관련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수급자 2만5천여명이 보유한비상장주식 1조2천억여원이 소득인정액산정에서 누락됐고 6천200여명에게 기초연금 38억여원이 잘못 지급됐다.

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7686명이 보증 금 799억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 가운데 보증금 2천만원이상의 수급자 1천222명을 조사한 결과 467명에게 33억원이 잘못지급됐다.

/연합뉴스



